

투데이 칼럼

소방안전 사각지대 '차상위계층'에 관심을

현재 남원소방서 관내 기초수급자수는 남원시(3,950가구 5,972명), 순창군(977가구 1,427명) 총 4,927가구 7,399명, 차상위계층은 남원시(1,992가구 2,485명), 순창군(765가구 984명) 총 2,757가구 3,469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돌보아야 할 대상이며 어느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차상위 계층이다.

기초수급자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주어지는 계층이다.

반면, 차상위 계층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하고, 지원 사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지원, 기초연금, 자활근로, 고교학비지원, 의료지원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부분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실제적으로는 기초수급자보다도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이 매우 많다.

2016년 7월 3일자 인터넷 토마토 뉴스를 보면 정부의 소득기준 지원이 최저소득 계층(1분위)에 편향해 있는 반면에 자녀양육지원금 및 교

육에 대한 혜택은 고소득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2분위인 차상위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다.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보통 차상위 계층이라 한다.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은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자인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있으나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에 등재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상위 계층은 정부차원의 배려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관심도가 낮아 우리사회의 안전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기초수급자 독거노인가정과 차상위자 가정을 방문한 기억을 되짚어보았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는 연탄과 김치 등이 많이

쌓여있는 반면, 차상위 계층 가정에는 빈 냉장고와 연탄참고만이 눈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다. 위 사례를 보면 사회적 관심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들에게 각종 사회단체의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에게는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다지 많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차상위 계층에게도 관심을 두어 이들에게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2016년 11월 21일 남원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차상위 계층 40여 세대를 대상으로 연탄 5,800장(남원시 18세대 3600장, 순창군 22세대 2,200장)을 기부하고 배달행사를 가졌다.

현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그들의 겨울나기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반대로 우리주변의 차상위 계층들은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힘든 삶을 살면서 차가운 겨울과 험겨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 소방안전 및 각종 안전체계의 사각지역에 위치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단한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절실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및 사회봉사단체가 앞장서서 차상위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개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항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에 이 글을 써 본다. 또한 이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는 염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소방관서는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차후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있어서도 차상위 계층으로 보급범위를 확대하여, 소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각종 사회단체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이들이 처한 어려운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국인 전주원산경찰서 서희파출소 순경

독자제언

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시책 구현

"국가보훈의 마음이 날개를 달고 찾아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이 고통회환에 따라 늘어가는 노후복지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통보훈복지팀을 구성해 가시간 병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노후복지 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 보훈대상자로서 독거노인이나 치매·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곤란함에도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훈성금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대책을 찾아가 세탁, 청소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노인용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보행보조기 등 노인·의료용품을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복권

위원회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독거 및 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성금이 방문횟수를 늘려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난 9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를 개선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수원, 남양주, 광주, 김해, 대구, 대전 6곳에서 보훈요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중풍, 노인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평소 가족들로부터 수발이 어려워 인근 복지시설 주간보호 또는 시설보호 등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다.

배귀례 전북동부보훈지청 복지사

독자제언

수험생들의 일탈,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수능시험을 막 끝마친 청소년들에게 우선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싶다.

수험생들이 그 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험이 끝난 이 시점에 많은 수험생들은 해방감에 음주와 흡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음주와 흡연을 접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과 사회단체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단속 및 선도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있다. 담배나 주류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제공하는 어른들은 엄격하게 처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PC방,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해업소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1998년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주류 판매가 불가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업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도 꼭 확인해야 한다. 해방감에 젖어 일탈하기보다 길고 긴 학창시절, 항상 곁에서 함께 한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이국인 전주원산경찰서 서희파출소 순경

사설

전북의 탄소산업, 경북의 들러리인가

한국의 탄소 산업이 어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전북이 들러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경북 쪽보다 그 역사가 오래이건만 받는 대우는 영판판이다.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전북은 13종의 사업을 위해서 154억 8천만원, 경북은 11종의 사업을 위해서 144억2천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과학기술평가원의 예타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렸다. 전북의 경우 86%를 삭감 당해 22억원이 배정됐고, 경북의 경우는 20%만 삭감해 115억7천만 원을 배정했다. 전북 쪽은 희망한 사업 중에서 10종의 사업을 싹 무시한 반면, 경북은 희망한 2종만 빼고 9종이나 인정해준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된다. 전북의 탄소산업이 경북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는 불만은 전혀 틀린 게 아니다. TK 출신 '포피아'들의 농간 때문이라는 항변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틀린 지적이 아니었다. 중앙정부가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쪽 출신 인사들이 항변하고 있는데 당연한 반응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할말을 해야 한다. 모든 지역이 고부 발전해야 하는데 지난 수십년간 그제 아니다.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탄소산업이 도민의 오랜 관심의 대상인데 찬밥 신세를 받고 있으니 섭섭하다. 전북의 탄소산업이 경북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대통령 하야를 오늘날에도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하다. 전북도는 지역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안 된다. 전북도는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헤아려야 한다.

본보가 예전에 사설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했거니와 전북의 예산 증액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대구와 경북 지역 쪽은 퍼주듯 하면서도 호남은 꼴금거리듯 인색하게 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도민을 상대로 힘을 내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다. 실제로 터덕거리고 있다면 그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거듭 강조해 말하건나와 전북도는 탄소 산업의 미래를 위해 비상한 행보를 보여야겠다.

지역업체의 호소 외면하지 말라

전북도는 지역의 건설업체를 위해 나서야겠다. 새만금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인데도 아무 실속이 없다고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오늘날 일거리다운 일거리는 외지 건설업체들이 싸움이 하고 있다. 컨소시엄에서 도내 업체들이 배제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조달청이 백억 원 규모대의 일거리는 실적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한지 오래됐는데 오늘

날 지역 업체들의 불만을 들어보자면 답답하다. 조달청이 실적입찰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방침을 굳혔을때 그 지역업체에게는 좁은문이 될거라고 본보는 걱정했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도내 건설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 뻔하다고 했었거니와 새만금의 남북 2축 도로 건설 사업이 외지 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다는 보도이다. 아무래도 이리다가는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고사할 게 뻔하다. 원가 일거리를 따내야 현상유지라도 할 터인데 말이다. 전북도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새만금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과는 달리 매년 외지 건설사들의 먹지판 되더니 이제 교량공사며 터널공사도 '그림의 떡'이 되게 생겼다.

도내의 업체들은 처음 입찰 때부터 난관이 예상되니 전북도는 무슨 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새만금 도로공사에 최소한 30% 정도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는데 그제 정녕 어려운가. 건설사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청과 조달청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문했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보고 있으니 시뻘대로 대략난감이다.

전북도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실정을 잘 알 것이다.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보다 실적이 미미하다. 그러므로 입찰 방식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건설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 정말 이래서는 곤란하다. 다시 말하건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돈이 돌지 않으면 안 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